

광주 그린벨트 무단 훼손...광산구 '뒷북행정' 빈축

지평동 소재 불법 벌목·형질 변경 등 산림청 계류보전지 인접...산사태 우려 작년 12월 원상복구 명령 뒤 확인 안해 區 "위법 사실 확인엔 강력 행정 조치"



광주 광산구 지평동 일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산림 일부 구간에 불법 돌계단이 설치됐다(왼쪽). 인근 숲 또한 무단 벌목으로 심각하게 훼손돼 흙바닥이 노출되는 등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지평동 일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훼손돼 산사태와 황룡강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가 이를 장기간 방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최근 지평동 산 28-2번지 및 산 27번지 일대 산림에서 무단 벌목과 대규모 돌계단 설치 등 묘지 조성을 위한 불법 형질 변경이 이뤄졌다.

이에 흙바닥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 토사 유출 방지 차원의 얇은 검은색 차광막만 임시로 덮여 있어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대규모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

베어낸 대나무 등도 널브러져 있어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훼손된 산자락 바로 아래에는 영산강의 핵심 지류인 황룡강이 흐르고 있어 비가 오면 토사가 그대로 유입될 처지다.

계다가 해당 지역은 2017년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가 국비를 투입해 조성한 '계류보전사업(광주 광산구 지평지구)' 대상지야

인접하거나 포함돼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하다.

계류보전사업은 산림 내 계곡(계류)에서 물

의 흐름 속도를 줄이고 침식을 막아 산사태·토석류·수해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개간과 형질 변경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우기 전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긴급 재해 방지 조치와 함께 행정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2월30일 하단부 돌계단(약 90.17㎡) 설치 등 일부 불법 사실을 파악하고 올해 1월13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안 확인을 위한 출장 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반년 가까이 이를 방치했으며, 심지어 산 위쪽에 대규모로 파헤쳐진 사실은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는 최근 소유주를 파악, '6월9일까지 시정조치 계획을 답변하라'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상당부 훼손 부위에 대한 뒤늦은 현장 파악에 나섰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위법이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육근 기자

“여고생 분풀이 살인 장윤기 엄벌해야”

추모연대, 오는 22일까지 서명운동 유가족 “채원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49재가 불행될 예정인 오씨는 22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오후 2시까지 참여자는 성인 6천733명, 청소년 741명이다.

유가족들은 “환하게 웃던 채원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는데 우리 아이는 이제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며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성토했다.

심야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일명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광주전남추모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장씨의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명 운동은 피해자의

추모연대는 장씨가 기소된 이후에는 재판부에 보내는 탄원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추모연대를 통해 세상을 떠난 딸아이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다. <사진>

그러면서도 채원이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알아만 있을 수 없다며 ▲장윤기 법정 최고형 선고 ▲친구·선생님 대상 치유 프로그램 추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저희와 함께 연대해 달라”며 “채원이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안재영기자

전남대 학생 “대전서 폭행 당해”...경찰 수사

“과잠입은 나에게 빨갱이...5·18 폄훼도” 광주북부경찰에 진정...둔산경찰서 담당

난달 23일 대전 서구 둔산동 한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글이 게시돼 있었다.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개인에 대한 폭력 사건을 떠나 지역 감정을 드러낸 행동”이라며 “5·18 민주항쟁 정신을 모독하고 회화화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마음에 진정을 넣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실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남대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소속이라는 글쓴이가 지

이 글에 첨부된 진정서에 따르면 글쓴이는 당시 '과잠'을 입고 있었는데, 이를 보고선 '빨갱이'라거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하는 발언을 듣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머리채를 붙잡히기도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착하기 전까지

실제 해당 진정은 지난달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북부경찰은 해당 사안이 발생 관할 지역인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이미 수사 중인 것을 확인, 중복 신고에 따른 중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찬용기자

오월단체, 美 스타벅스 본사에 '탱크데이' 항의

CEO 등 4명에 메일...진상조사 등 요구 재단, '일베' 광고 노출 기업에 중단 요청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오월 단체들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 미국 본사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5·18기념재단은 이날 5·18민주화운동을 애곡하고 유공자를 폄훼해온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광고가 노출된 신세계 면세점 등 기업 9곳에 광고 집행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총회)와 함께 미국 스타벅스 CEO 등 관계자 4명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냈다.

재단은 공문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조롱은 피해 당사자와 지역사회는 물론 민주주의 가치에도 중대한 상처를 남긴다”며 “광고 매체 선택에도 역사·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규탄하는 이 메일에서 단체들은 미국 스타벅스 경영진의 즉각적인 개입과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진상조사, 강력한 제재 조치 및 책임 추궁,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그러면서 “기업의 광고 집행은 사회적 메시지와 책임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귀사의 광고가 일베에 노출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연성기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검찰청

고의 교통사고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대행업체 대표와 소속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기사 1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대표 A(40대) 씨와 관리자 B(40대)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보험 사기를 저지른 배달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총 2차에 걸친 사고를 내고 피해 규모를 부풀려 총 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A씨는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식당에 고의로 불을 내고 화재 보상금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안재영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